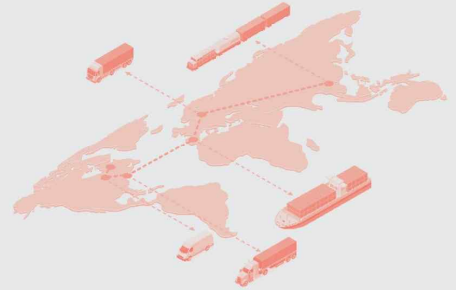




# EU 방위산업 주요 정책 및 동향



# EU 방위산업 주요 정책 및 동향



## 목 차

<b>I. EU 안보·방위 정책</b>	<b>5</b>
<b>II. EU 안보·방위 강화 정책</b>	<b>9</b>
<b>III. EU 방위산업 지원 정책 추진 동향</b>	<b>18</b>
1. EU 예산 내 안보·방위 예산 확대 동향	19
2. 유럽 방위기금(EDF)	21
3.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23
4. 유럽 안보 실행 계획(SAFE)	27
5. EU 금융 기관의 방위 분야 지원 확대	29
6. 방위 대비 로드맵 2030	31
7. 군 기동성 규정	36
8. 방위산업 전환 로드맵	39
<b>IV. 시사점</b>	<b>42</b>
부록 1. EU 주요 방위산업 정책 표	45
부록 2. EU의 국방비 지출 동향	46

**요 약**

**□ EU 안보·방위 정책의 변화**

- EU,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안보·방위 정책 강화
  - 러-우 사태 장기화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EU는 자체적인 안보·방위역량 확보를 우선순위로 추진
  - 유럽 방위산업전략(EDIS, '24)과 유럽 방위백서('25)를 통해 회원국 간 역량 격차 완화, 산업·공급망 기반 강화 등 전시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가 본격화
- EU 방위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EU는 유럽 방위기금(EDF)를 통한 혁신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넘어 방위 장비 공동조달, 대출, 투자, 산업 생태계 조성, 혁신기술 산업화, 신속한 장비 이전 등 방위 장비 생애주기 및 공급망 안보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
  - 또한 EU 회원국과 EEA-EFTA,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재정지원 정책에 엄격한 역내 우선 조항 및 역외산 부품에 대한 상한 기준\* 도입
    - \* EDIP와 SAFE는 지원 대상 프로그램 및 제품의 역외산 부품 비중을 35% 상한으로 제한

**□ EU 주요 방위산업 정책**

- 유럽 방위기금(EDF, Europe Defence Fund)
  - 회원국 간 공동 방산 기술 개발 촉진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R&D 지원 정책, 매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발표 및 공모 진행
-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Europe Defence Industrial Programme)
  - EU 방위산업기반의 역량 강화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조달·생산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스케일업 기금(FAST), 3개 이상 회원국의 공동 군비 조달 제도(SEAP), 유럽 공동이익방위프로젝트(EDPCI) 추진 예정
- 유럽 안보 실행 계획(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 회원국의 신속한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EU 회원국, EEA-EFTA, 우크라이나의 공동 조달 지원 정책, 신청한 회원국의 공동조달에 SAFE 대출 제공 예정

**<방위 장비 생애주기와 관련 EU 규정>**

방위 장비 생애주기	기획 (Planning)	연구 (Research)	개발 (Development)	생산 (Production)	공동조달 (Joint Acquisitions)	유지·정비 (Maintenance)
관련 EU 규정		EDF			SAFE	
					EDIP	

## I EU 안보 · 방위 정책

### □ EU 안보·방위 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

#### ○ 개요

-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은 EU 차원의 안보·방위 협력의 양대 축으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 회원국 간 안보·방위 협력의 기본 토대를 제공
- CFSP는 EU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며 전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CSDP는 방위 및 위기관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행 체계를 구축
- CSDP를 통해 전통적으로 회원국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던 방위·안보 분야에서의 EU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러-우 사태 이후 관련 기구 및 기금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화됨
- 이는 개별 회원국이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EU 차원의 집단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EU는 방위뿐 아니라 경제, 무역, 산업 분야에서도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 EU 차원의 대표 외교·안보 정책

-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은 '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도입 후 EU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정책 틀로 기능하고 있으며, 평화 유지, 국제 안보 강화, 국제 협력, 민주주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함

\* '93년 발효된 EU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5부 제21조는 CFSP의 목표와 구조 및 운영을 규정

- CFSP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정부 간 협의 체제로 집행 위원회의 외교안보 고위대표(HR/VP)가 EU 외교의 대표로서 유럽 대외관계청(EEAS)을 이끌고 회원국 간 조정을 담당
- EU는 CFSP를 통해 대외정책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며, 외교적 수단 포함,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 절차, 제재, 유럽 주변국 정책, 대외 무역,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특사 파견 등을 결정
- 하지만 CFSP는 회원국 만장일치라는 의사결정 구조와 직접적인 군사활동 자금으로 EU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재정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차원의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

#### □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 CFSP의 제한을 넘어 안보방위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
  - EU는 '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CFSP의 하위 구성요소로 공동안보 방위정책(CSDP)을 도입, EU가 구체적 안보방위 문제와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해 자체 상설 기구와 별도 기금을 수립하도록 조정
    - \* '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TEU 제42~46조의 CSDP 근거 마련
  - CSDP는 위기관리 시 임무수행\*을 위한 민·군 공동체제로 의사결정 구조상 CSDP 관련 결정은 회원국 국방장관으로 이루어진 EU 외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짐
    - \* 평화유지, 분쟁예방, 국제안보 강화 등
  - EU 대외정책 고위대표(HR/VP)는 국방장관 이사회를 주재하고 CSDP 정책을 회원국에 제안, EEAS와 EU 군사참모부, 군사위원회(EUMC)는 정책 개발 과정 지원
  - CSDP는 위기관리 임무 수행(평화유지, 분쟁예방, 국제안보 강화)을 위해 민·군 공동체제를 발전, 이를 통해 EU는 분쟁지역 안정화, 파병군 훈련 등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게 됨

- 다만, 군사적 임무나 활동에는 EU 일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회원국들의 직접적인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유럽 평화 기금(EPF)을 통해 조달
  - \* EU 조약(TEU) 41조 제2항은 EU 예산을 군사적 함의를 갖는 작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 EU의 주요 방위 기구
  - CFSP는 EU 안보 정책의 목표와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1년 유럽 대외관계청(EEAS)을 출범, EEAS는 기존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 외교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구성
  - '17년 유럽 방위기금(EDF)을 신설하여 EU 예산으로 방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21년 직접적으로 군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럽평화기금(EPF)을 개발하는 등 EU 방위 기구의 기능과 자원이 확대되고 있음

**<EU의 기존('22년 이전) 방위기금 및 기구>**

기구	주요 내용	설립 연도
EU 군사위원회 EUMC <small>EU Military Committee</small>	EU 회원국 참모총장들로 구성되어 EU에 군사적 조언·권고제공	2001
EU 군사참모부 EUMS <small>EU Military Staff</small>	EUMC의 지휘 아래 군사 작전의 계획 및 상황 감시, 군사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 참모 기구	2001
EU 안보연구소 EUISS <small>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small>	안보 및 국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공식 싱크탱크	2002
EU 위성센터 SatCen <small>EU Satellite Centre</small>	EU 및 회원국의 안보, 위기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 정찰, 지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002
EU 방위청 EDA <small>European Defence Agency</small>	회원국의 국방 역량, 군사 능력 개발을 위한 방위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EU 기구로서 회원국 간 자발적인 국방 협력을 촉진	2004
유럽 대외관계청 EEAS <small>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small>	EU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행정기구로, EU의 외교 정책과 안보정책을 계획하고 집행, EU 집행위 공무원, EU 이사회 소속 공무원, 각 회원국 파견 외교관이 지역과 주제별로 부서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나 EU	2011

기구	주요 내용	설립 연도
	이사회에 정책을 제안,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EEAS를 총괄 * 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유럽 방위기금 EDF (European Defence Fund)	EU의 공동 안보국방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금으로 국방 분야의 연구, 기술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활용, 방위 기술·장비 연구, 개발 단계에 투자. 최소 3개 이상 회원국 공동 참여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 EDF는 EU의 다년도 재정계획에 포함된 기금으로 '21~'27년까지 약 73억 유로 할당	2017
상설 구조협력 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EU 회원국 간의 보다 구속력 있는 군사적 협력과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 및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몰타 제외 26개 회원국 참가) 국방 예산 증액, 공동 투자, 군사 역량 통합 등 구체적인 목표를 약속하고, 공동 국방 프로젝트 등을 수행	2017
유럽 평화기금 EPF (European Peace Facility)	EU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관점의 군사 작전 자금을 지원하고, 제3국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EU 일반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EU 회원국의 국민총소득(GNI)에 비례하는 기여금으로 운영	2021

자료 : EU 집행위원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바탕으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참고) EU와 NATO의 관계**

- EU는 창립 과정에서 군사적인 권한을 각 회원국의 주권으로 상정하고, EU는 회원국의 국방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 회원국 국방 역량 지원을 위해 EU는 '04년 유럽방위청(EDA)을 설립, 회원국의 군사능력 개발, 방위 연구, 산업 협력 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 다수의 EU 회원국은 NATO 가입을 통해 NATO 차원의 집단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EU는 회원국들의 집단 방위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NATO와의 협력을 통하고 있으며, NATO와의 협력은 CFSP와 CSDP의 중요한 요소로 EU 조약에도 다자주의 및 NATO 등과의 협력 강화가 명시되어 있음

EU 회원국	2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b>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몰타, 아일랜드</b> * NATO 미가입 EU 국가는 파란색 글씨
NATO 회원국	3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b>알바니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 영국, 미국</b> * 비EU NATO 회원국은 파란색 글씨

## II EU 안보 · 방위 강화 정책

### □ EU의 안보·방위 정책의 변화

#### ○ 개요

- EU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안보·방위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기존 CFSP와 CSDP를 넘어서는 EU 안보·방위 논의 확대
- 특히 '22.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안보·방위역량 강화를 넘어 EU 방위역량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문서 및 정책 수립이 본격화됨
- EU는 회원국 공통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집단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체적인 정책 지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회원국 간의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조달 지원과 함께 역내 방위 기술 및 산업기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 지속가능성, 공급망 안정 등 산업 정책을 방위 정책에 포함하는 추세

### □ 2022 EU 전략 나침반(Strategic Compass)

#### ○ EU 공통 위협을 평가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비전 제시

- EU 이사회는 러-우 사태 이후 한 달 만인 '22.3.21일, EU 차원의 포괄적 안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30년까지의 관련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 역량에 대한 전략 문서를 채택
- '전략 나침반'은 EU가 직면한 공통 위협을 평가하고 회원국 간 향후 위협 인식을 공유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비전을 통해 EU 차원에서 목표로 하는 군사·안보 역량의 수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

- '전략 나침반'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로 발행되었으나, 이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EU의 CSDP 이행을 위한 지침 역할로 회원국은 관련 이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 전략 나침반은 안보 및 방위 정책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실행, 보안, 투자, 파트너십 등 4개 축으로 구성

**(참고) EU의 법적 체계**

- EU는 법적 구속력과 적용 방식에 따라 5개 수준의 법적 결정이 있음
- **규정(Regulation)** :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 국내법으로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EU 차원이 단일한 법으로 작용
- **지침(Directive)** : EU 차원으로 합의된 구속력 있는 법적 목표나 결과가 있으나, 법적 구현을 위해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구현 방식도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 있음
- **결정(Decision)** : 특정 회원국·개인 등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지정된 당사자에 직접 적용
- **통신문(Communication)** : EU 차원의 정책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후속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제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음, 이사회도 Political document (회원국 합의), Common Position 등 유사한 법적 수준의 문서를 발행할 수 있음
-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 회원국 등이 다른 기관이나 회원국에 행동 지침 및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언 성격의 문서

○ EU 전략 나침반 주요 내용

- (목표) 최대 5천 명 규모의 EU 신속대응역량 구축, 군사 기동성 향상, 역내·외 CSDP 임무 및 작전 역량 강화 등
- (보안) 단일 정보 분석체계(SIAC)를 확대하여 정보 역량 강화, 사이버 공격 및 가짜뉴스 대응 위한 복합 위협 대응 도구 마련, 사이버 방어책 강화
- (투자) 방위비 지출 확대 및 효율화(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조달 촉진), 전략적 핵심 역량(차세대 전투기, 첨단 해군 플랫폼, 전차, 우주 기반 시스템 등) 확보, 유럽 방위기금(EDF) 및 PESCO를 통한 공동 연구 개발, 유럽방위청 내 방위 혁신 허브 신설
- (파트너십) NATO·UN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양자 파트너십 심화, 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포럼 신설 등

○ 주요 성과

- EEAS는 매년 '전략 나침반'의 목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연례 보고서와 포털을 통해 관련 성과를 발표

**<EU 전략 나침반의 주요 성과>**

분야	주요 성과	시행 연도
실행 (Act)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임무 개시	2022
	기니만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민간 군사 전문 지식 제공을 위한 안보·방위 이니셔티브 출범, 몰도바 EU 파트너십 미션, 아르메니아 EU 대표단 출범	2023
	홍해 및 걸프 지역 보안 강화 해상 작전 EUNAVFOR ASPIDES 출범	2024
	EU의 신속 대응 역량 가동	2025
보안 (Secure)	안보·방위를 위한 EU 우주전략 채택, 사이버 방어 정책 및 해양 안보전략 개정, 사이버 보안을 위한 NIS2, 핵심 인프라 복원력에 대한 조치 채택	2023
	사이버 복원력법 및 사이버 연대법 채택, 외국 정보조작·간섭 대응 도구 개발, 회원국·파트너 지원을 위한 하이브리드 신속 대응팀 설립	2024
	EU 위기 대비 전략(Preparedness Union Strategy) 발표(3.26)	2025
투자 (Invest)	EU 예산 내 공동 방위 조달에 3억 유로, 탄약 생산 확대에 5억 유로 지원	2023
	회원국 2,360억 유로 국방지출('24년 기준 1,020억 유로 관련 투자) 달성	-
	유럽 방위산업프로그램(EDIP) 내 관련 협상 진행, 방위백서 통해 EU 방위 장비 공동조달 규정(SAFE) 발효 및 EU 재정준칙 유연화 결정	2025
파트너십 (Partner)	제3차 EU-NATO 공동선언 서명	2023
	슈만 안보 및 방위 포럼 조직	2023~2024
	EU-UN 협력 및 공동 우선순위 세트를 구현하기 위한 대화	2022~2024
	역외국가와의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 체결	2024~

자료 : EU 이사회, 전략 나침반([링크](#))

## □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 ○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최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전략문서

- EU 집행위원회는 러-우 사태 대응 및 회원국 국방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역외국에 대한 무기 및 방위 장비 의존이 심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4.3.5일 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

\* 러-우 사태 이후, EU 역외 무기 의존도는 기존 60% → 80%로 증가

- EDIS는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유럽의회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문서\*로, 러-우 사태와 미국의 방위 지원이 불확실해지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해 신속히 방위태세로 전환 제안

\* EDIS는 회원국에 관련 비전을 제시하는 통신문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제안된 목표와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EDIP(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가 함께 제안됨

- 또한 '35년까지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역내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EDTIB,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강화를 강조
- '30년 까지 회원국 국방 및 방위산업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방위 장비 공동조달을 확대하고, 공동조달 내 EU산 제품 비중 증대를 위한 목표 제시

### ○ EDIS 주요 내용

- (목표) '30년까지 △역내 방위 장비 수요의 최소 40%를 공동조달 통해 확보, △회원국 방위 관련 투자의 최소 50%를 역내 산업에서 조달, △EU 방산 시장 내 역내 거래 비중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핵심 구현수단) EDIS 실행을 위해 관련 규정 EDIP(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제안, 해당 프로그램의 협력·조달 등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제정하여 EDTIB의 구현 방안 마련

- (자금조달) △EDIP 내 방위산업 공급망 전환 가속화 기금(FAST)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에 15억 유로 지원, △차기 EU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을 통해 금융 지원 방안 추가 논의
- (EU 차원 협력) △회원국, 집행위원회, EEAS, EDA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준비 위원회를 통해 각국 조달 계획, 산업 역량 등을 파악하여 전략적 우선순위 등을 설정, △EU 공통 요구사항, 표준 및 상호 인증을 강화해 국가 간 지나친 특성화(customisation) 완화, △방위 장비 조달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여 조달 절차 간소화, 자금 인센티브, VAT 감면 혜택 부여
- (생산능력 확대) △기존 우크라이나 탄약 긴급 지원 프로그램인 ASAP 방식을 탄약·미사일 외 분야로 확대하고, 상시 가동 가능 시설이나 위기 시 민간 생산라인 용도 변경 가능성 등 검토, △우크라이나와 드론 공동 생산 위해 관련 지원 및 수단 동원 위한 정책 마련
- (공급망 관리) △위기에 대비하여 핵심 원자재·전자 부품 등 기초 생산 요소의 비축 고려, △EU 기술 관측소를 활용해 기술 로드맵 및 역외 의존성을 식별하고 완화

## ○ 추진 동향

- EDIS는 EU 차원의 최초 통합 방위산업 전략으로, 집행위원장이 '23년 연례 국정연설에서 추진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뒤, '24.3월 전략 문서 형태로 발표됨
- EDIS 발표 이후 집행위원회는 '24.12.1일 방위 담당 집행위원 직위를 신설·임명하고 그동안 회원국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위 정책 분야에서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집행위원회는 '25년 중 EDIS를 기반으로 한 'EU 방위 백서(Defence White Paper)'를 발표, 장기 방위역량 강화 및 역내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함

□ EU 방위 백서 : 대비태세 2030(Defence Readiness 2030)

○ '30년까지의 EU 방위 계획 및 전략 수립

- '25.3.19일, EU 집행위원회는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의 주요 공약이었던, 방위 백서와 관련 정책 패키지를 발표
- 방위 백서는 '30년까지 EU 재무장을 위해 회원국의 신속한 대규모 국방 투자와 이것이 역내 생산 제품으로 구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방위 장비 공동조달 규정인 SAFE와 함께 발표됨
- 이는 EU 방위 투자 활성화를 위한 8,000억 유로 지원의 일부로 EU는 SAFE를 통한 회원국 공동조달 대출에 1,500억 유로, EU 재정 준칙 유연화\*를 통해 회원국 국방비 확대에 6,500억 유로 동원 계획

**<국방비 투자를 위한 EU 재정준칙 유연화와 관련 동향>**

- EU는 재정준칙인 안정과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유로화의 안정성과 회원국의 건전재정을 위해 EU 조약(TFEU 126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3% 이하, 정부 부채는 GDP 60% 이하를 유지하도록 요구
-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3.19일 EU 국방백서 발표와 함께 회원국의 국방 지출 확대를 위해 EU 재정준칙 예외 적용을 위한 통신문을 발표하고, 7.8일 EU 이사회는 국방 강화를 위한 예외적인 필요성을 인정해 '29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국 국방 투자에 한해 GDP의 1.5%까지 재정적자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
- (재정준칙 유연화 신청 회원국)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방위 백서는 회원국 간 방위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 및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방위역량 분야를 제시하고, 역내 방위산업 강화 계획,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방안 등을 제시

○ 방위 백서 주요 내용

- (방위역량 격차 해소 및 협력) △방위 장비 공동조달, △군사 물자 및 기동성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주요 도로 및 인프라 연결성 향상, △방위 기술 및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전략적 대화와 규제 간소화(방위분야 옴니버스), △방산 장비·부품·핵심 원자재 비축 및 조정을 위한 초국경 산업 파트너십과 조치 개발 및 지원

- (우선순위) 방위력 강화를 위해 7개 우선순위 분야 지정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포병 시스템 현대화, △탄약 및 미사일 비축 및 생산 역량 강화, △드론 및 드론 대응 시스템 구축, △군사 운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AI, 양자컴퓨팅, 사이버·전자전 역량 개발, △전략적 공수 지원 및 핵심 인프라 보호 등
- (역내 방위산업 강화) △역내 생산성 강화와 기업 투자 확대 위해 방위 분야 총수요 확대 및 회원국 수요 통합·대규모 장기 발주 등 공동조달 구조화, △우주 및 방위역량 관련 핵심 기술 관측소(OCT, Observatory of Critical Technologies) 설립 및 관련 기술 로드맵 개발
- (우크라이나 지원확대) △EU는 방위 백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유럽 안보와 새로운 국제질서 정의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고 관련 지원 확대 약속, △방위산업 혁신을 위해 역내 방산 기술 개발에 우크라이나의 접근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EU 방산 기술·시장의 통합 추진

○ 추진 동향

- 방위 백서는 EU가 논의해 온 안보·방위 정책을 총망라한 정책 문서로,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함께 발표된 EU 재정준칙 유연화와 회원국 방위 장비 공동조달을 위한 SAFE 규정 발효 완료(5.29)
- '30년까지의 방위역량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 법안이 입법될 예정으로, '25.10.16일 대비 태세 2030 로드맵 발표

□ 방위 대비 옴니버스 (Defence Readiness Omnibus)

○ 방산 분야 투자·생산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 추진

- 집행위원회는 EU 규제 전반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행정 절차 단순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 옴니버스를 방위 분야 법안에 적용하여 '25.6.17일 방위 대비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

**(참고) EU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 폰테어라이언 2기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규 법안을 입법하는 '옴니버스 패키지' 입법을 연속 추진 중
- **지속가능성 옴니버스(25.2.26)**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간소화
- **투자 옴니버스(25.2.26)** 투자 정책(InvestEU, EFSI 등)을 단순화
- **농업 옴니버스(25.5.14)** 공동농업정책(CAP)의 보조금 분배 및 환경 요건 간소화
- **중견기업 옴니버스(25.5.21)** 중견기업(SMC) 기업 분류 신설 및 디지털화 강화 및 의무 완화
- **방위 대비 옴니버스(25.6.17)** 방위 투자·생산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 및 신규 제도 도입
- **화학 옴니버스(25.7.8)** 화학산업의 규제준수 비용 및 행정 부담 완화
- **디지털 옴니버스(25.11.19)** 데이터법, GDPR,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데이터 법률 개정

- 방위 분야 옴니버스는 방위산업 분야의 공동조달·허가·보고·경쟁·자금 접근성 등을 포괄해 신규 법안과 개정안을 제안하고, 기존 규제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

○ **방위 옴니버스 주요 내용**

- **(신속 허가)** 방위 인프라 프로젝트(신규 제조 시설·훈련 구역 확장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시스템 도입하여 회원국 별 단일 연락 창구를 마련하고, 우선심사 지위 부여, 60일 이내 허가 발급 간주 제도 적용 등 포함
- **(투자 가속화)** △EDF는 중간 평가 보고서 바탕으로 신청 요건 간소화, 지원금 지급 기간 단축 등을 통한 예측 가능한 이행 절차 제공, △ InvestEU는 복잡한 적격성 요건을 간소화하고, 역외 기업에 적용되는 제한 범위 조정 및 기금 이행 방식 명확화, △EU 지속가능금융 프레임 워크(SFF)는 국제 협약의 금지 무기를 명확히 규정해 관련 무기 투자는 지속가능 투자 지수에서 제외 등
- **(방위 장비 조달 확대)** △EU 방위 조달 지침을 개정하고 절차 간소화로 계약 당국 및 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방위·서비스 조달 규모 2배 확대 예정, △최소 3개국 이상 참여 공동조달에 인센티브 제공, △혁신 제품 개발 및 전략적 재고 확보를 위해 조달 절차 유연화 등

- (역내 거래 활성화) 최대 1년까지 소요되던 회원국 간 방위 장비 이전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반 이전 허가(General Transfer Licences) 도입 확대, △인증 기업 통한 이전 절차 간소화, △전용 허가 도입해 유럽 방위기금(EDF) 프로젝트 지연 방지
  - (예외 규정) 공익 우선 면제 조항에 방위 관련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방위 공급망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REACH 및 기타 EU 환경·화학물질 관련법의 면제 허용
- 추진 동향
-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집행위원회의 통신문과 함께 신규 입법안과 개정안 등이 포함, 향후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검토를 거쳐 합의 및 승인 필요
  -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방위산업 육성 및 신속히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입법기관에 신속한 채택을 촉구

III

## EU 안보 · 방위 강화 정책 추진 동향

### □ 개요

- EU, 지정학적 불안정성 대응을 위해 방위·안보 분야 예산 확대
  - '22년 러-우 사태와 美 대외정책 기조 변화 이후, EU와 회원국은 자체 안보 역량 확보를 위해 역내 관련 산업 기반 육성 및 재정 지원 강화
  - 집행위원회는 '28~'34년도 EU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은 안보·방위 EU 예산을 강화하도록 제안했으며, 공동조달 지원, 전용 투자 기금 등 구체적 재정·제도적 수단 설계가 병행되고 있음

#### (참고) EU의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 EU는 장기 예산 계획을 통해 예산 규모와 사용처를 규정, 현재의 7년 주기 다년도 재정운용 계획(MFF) 체제가 '14년부터 시작. EU 집행위원회가 EU 예산의 상한과 정책별 지출 범주 (heading)를 제안하고,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면 유럽의회 동의를 통해 최종 결정됨

#### <EU의 역대 MFF 총예산과 방위 관련 예산>

MFF 주기	총예산 상한	방위 관련 예산
'14~'20년	약 9,600억 유로	EDF 파일럿 프로그램에 '17~'20년 동안 5억 9,000만 유로 배정
'21~'27년	약 1조 8,243억 유로	방위 분야에 85억 유로, 우주 프로그램에 132억 유로 배정
'28~'34년	약 1조 9,849억 유로*	방위, 우주 분야에 총 1,310억 유로 배정

\* '28~'34년 예산은 MFF 초안('25.7월) 기준으로 '25.10월 현재 협상 진행 중으로 향후 변경 가능  
자료 : EU 집행위원회 및 브뤼셀무역관 종합

- 또한 기존 EDF 중심의 방위산업 분야 혁신기술 R&D 지원을 넘어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유럽 안보 실행 계획(SAFE) 등을 통해 방위 장비 생애주기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방위 장비 생애주기 관련 EU 규정>

방위 장비 생애주기	기획 (Planning)	연구 (Research)	개발 (Development)	생산 (Production)	공동 조달 (Joint Acquisitions)	유지·정비 (Maintenance)
관련 EU 규정		EDF			SAFE	
					EDIP	

## 1. EU 예산 내 안보·방위 예산 확대 동향

### ○ EU의 '21~'27년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

- '21~'27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을 위해 EU가 공동채권으로 조성한 7,500억 유로 규모 경제회복기금(NGEU)이 포함, 총 1조 8,243억 유로 규모 MFF가 '21.1.1일 발효
- '14년 MFF 체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EU 예산 지출 분야로 방위 관련 예산이 편성, 안보·방위 분야 예산 131억 유로 중 역내 안보에 약 40억, 방위 분야에 약 85억 유로 배정

<'21~'27년 MFF 지출 분야('18년 가격기준)>

지출 항목	예산
1. 단일시장, 혁신, 디지털 (Single Market, Innovation and Digital)	1,327억 유로
2. 통합, 복원력, 가치 (Cohesion, Resilience and Values)	3,777억 유로
3. 자연자원 및 환경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563억 유로
4. 이민, 국경 관리 (Migration and Border Management)	226억 유로
5. 안보, 방위 (Security and Defence)	131억 유로
6. 대외관계 (Neighbourhood and the World)	984억 유로
7. 공공행정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731억 유로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b>총액</b>	<b>1조 8,243억 유로</b>

자료 : EU 집행위원회 '21~'27년 MFF([링크](#))

- (개정) '22년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개정 논의 확대, 이에 집행위원회는 '23.6.20일 개정안을 제안하고, 합의를 거쳐 '24.1.1일부터 적용

#### (참고) '21~'27년 MFF 개정안('24.1.1~)

- 5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유럽전략기술 플랫폼(STEP) 예산 추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NGEU 이자 상승분 충당, 자연 재해·이민 등 위기대응기금 재편 및 유연성 기금 확대 등

○ EU의 차기 '28~'34년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 집행위원회는 EU의 우선순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MFF 개혁안 ('25.2)과 1조 9,849억 유로 규모의 차기 예산안을 발표('25.7)
-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액 및 지출 구조 재편, 집행 방식 단순화를 추진하며, 기존 복잡한 예산 항목을 조정하여 4대 지출 항목과 16개 예산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

<참고 : '28~'34년 MFF 지출 분야>

지출 항목	내용	예산
1. EU 통합 및 격차 해소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NRPP), 차세대 EU(NGEU) 기금 상환, EU Facility 기금, 이민 및 국경 관리, Interreg 등	1조 622억 유로
2. EU 경쟁력 강화	EU 경쟁력 기금(ECF),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유럽 연결 기금(CEF), 에라스무스+, 유럽시민보호기구+(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 AgoraEU 등	5,896억 유로
3. EU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유럽기구 및 공동 외교 안보 정책 등	2,152억 유로
4. 기타	공공행정 및 관리 비용 등	1,179억 유로
<b>총액</b>		1조 9,849억 유로

자료 : EU 집행위원회 '28~'34년 MFF 초안([링크](#))

- 집행위원회는 차기 MFF에 방위 관련 예산으로 EU의 경쟁력 기금 내 방위 및 우주 분야에 1,310억 유로 책정, 이는 현 MFF의 방위 관련 예산의 5배 수준
- 특히 유럽연결기금(CEF)의 군사 기동성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증대, 철도·항만·공항 등 운송 분야 이중용도 인프라, 사이버 보안, 방위 인프라 개발 등 관련 분야 전반에 민간투자 견인 효과 기대
- 동 예산안은 집행위원회의 초안으로, EU 이사회의 승인과 유럽의회 동의 필요, '27년까지 예산 규모·집행 구조에 대한 협의 지속 전망

## 2. 유럽 방위기금(EDF, Europe Defence Fund)

### ○ 국방 분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EU 기금

- EU는 공동안보·방위 정책(CSDP)의 틀 안에서 회원국 간 공동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역내 방산 기반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17년 EU 차원의 국방 분야 연구 개발 지원 기금인 EDF를 수립\*
- \* '17~'19년 방위 연구 예비 조치(PADR)와 '19~'20년 유럽방위산업 개발 프로그램(EDIDP)을 거쳐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현 EDF 체제가 출범
- '21~'27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에 따라 EDF에 EU 자금 79억 유로가 편성\*, 이 중 약 27억 유로는 협력적 국방 연구, 약 53억 유로는 회원국 투자를 보완해 협력적 개발에 배정
- EDF는 수립 이후 방위 R&D 분야 투자로 54억 유로를 지원하며 유럽 내 주요 방위 투자 재원으로 자리매김

### ○ 운영 방식

- 집행위원회는 매년 작업 계획\*을 통해 방위 연구분야 우선순위에 따라 공개 공모,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EUDIS), PESCO 연계 프로젝트 등 30여 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 작업 계획(work programme)은 EU 기금 운용 시 주요 수행 조치 목록을 담은 문서
  - 과제는 기술 개념, 실험실 테스트 등 초기 단계의 방위 연구 과제와 프로토타입, 시험 및 시스템 통합 등의 개발 과제로 구분
  -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프로젝트 선정 시 일반적으로 방위 연구 과제는 적격 비용의 최대 100%, 개발 과제는 최대 80%까지 재정 지원 가능, 프로젝트 종료 후 지적 재산권은 컨소시엄에 귀속
- EDF는 역내 방위산업의 혁신·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모 과제는 최소 3개\* EU 회원국 및 연관국, 해당 국가에 설립된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이 제안서 제출 가능
  - \* 연구 과제의 경우 2개국 및 2개 기업의 컨소시엄도 참여 가능

- EDF 규정은 관련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EU 회원국 및 연관국(Associated Country)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하고 제3국·제3국 기관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
- 만약 회원국 및 연관국에 설립된 제3국 및 관련 법인은 해당 기관이 설립된 회원국 및 연관국가의 국내 절차에 따른 보증 및 정보 보안·지식 재산권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보장 조치하에 참여 가능

**(참고) EDF의 연관국**

- EDF 설립에 관한 규정((EU)2021/697)에 따르면 EDF는 EU 회원국과 EFTA 회원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중 EE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 속한 국가 들은 참여 가능. 이 중 노르웨이는 EU와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 체결('24.5.28)
- 한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EU와의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EDF 기금에 연계하기로 합의('25.11.5)

**○ EDF '25년 작업 프로그램**

- 집행위원회는 '25년 EDF 연간 작업 계획을 채택(1.30), 예산 규모는 총 10억 6,500만 유로이며, '25.2.18일부터 10.16일까지 31개의 프로젝트 공모 진행
  - 공모 기간 내 제출된 제안서는 집행위원회, 독립된 외부 전문가, 각 회원국 관련 기관들의 평가를 거쳐 '26.4월 중 선정 결과 발표, '26.12.31일까지 프로젝트 계약서 서명 완료 예정
- '25년 작업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육·해·공 전투체계와 훈련뿐 아니라, △우주, △에너지 복원력, △의료 대응·부상자 분류·대피, △다기능 정보 배포 시스템, △방위용 반도체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
- 특히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의 목표와 연계된 과제 포함 및 관련 자격 요건 충족 시 STEP 인증 부여해 추가 투자유치 가능성 확대

**(참고) EU의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 EU 내 핵심 전략기술(디지털, 딥테크, 청정산업, 바이오 기술 등) 분야에서 산업 역량 강화와 투자 촉진을 목표로 설립, 우수한 품질의 기술 및 제안서에 STEP 인증(Seal)라벨을 부여, 향후 EU 및 회원국의 추가 자금 연계 기회를 확대

○ EU 국방혁신제도(EUDIS, EU Defence Innovation Scheme)

- EDF는 대형 무기체계 및 공동개발 중심의 구조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혁신적 연구나 기술 육성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고자 EDF 산하 혁신 지원 전용 트랙으로 EUDIS를 별도 운영
- EUDIS는 EU와 우크라이나 내 스타트업·중소기업·연구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해 혁신 활동을 지원, △AI 기술, △우주, △에너지 복원력, △지상 및 사이버 전투 등 이중 용도 시너지 기술을 중점 지원하며, '25년에는 특히 지상 전투 및 병력 보호 역량에 초점

3.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 역내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정책

- 집행위원회는 유럽방위산업 전략(EDIS)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와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EDIP 규정을 제안('24.3.5)
- \* 방위 장비의 최소 40% 공동조달, 회원국 국방 조달 예산의 50%를 역내 조달, EU 방산 시장의 역내 거래 비중을 35%로 확대

- EDIP는 EDF(방위 혁신기술 지원), 긴급 공동조달 지원 정책(EDIRPA, ASAP)\* 등 기존 EU의 방위 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 향후 대규모 공동조달과 방위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

\* ASAP는 포탄, 미사일, EDIRPA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방위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25년 종료

- 특히 △EDTIB 경쟁력 및 위기 시 대응력 강화, △방위 장비 적시 공급 보장을 위한 공급망 안정성 구축, △우크라이나-EU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및 현대화 지원을 3대 축으로 정책 추진

○ EDIP 규정의 주요 내용\*

\* EDIP 규정은 11.24일 기준 입법 과정 중에 있어 관보 게재 이후 최종 법안 확인 필요

- EDIP는 개별 방위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추진될 방위 프로젝트와 공동조달 시행을 위한 체계 수립

## ① EDTIB 강화

- 방위 장비 공동조달 역량과 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방위 공급망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금(FAST)\*을 설립하고 유럽 군비 프로그램을 위한 구조(SEAP)\*\* 및 공동조달 지원 제도 도입

\* Fund to Accelerate defence Supply chains Transformation

\*\* Structure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

- **(FAST 기금)** 중소기업의 방위 제조 역량 강화 및 산업화를 위해 자본 조달 및 대출을 촉진하는 기금으로, investEU\* 프로그램과 함께 중소 및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산업화 지원 예정

\* InvestEU는 EU의 예산보증을 통해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급망 전환을 촉진하는 FAST와 투자 규모 확대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InvestEU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 예상

- **(유럽 군비 프로그램 구조, SEAP)** 3개 이상 회원국\*의 공동 군비 조달을 제도화하고 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명주기 전반(조달·운용·정비·업그레이드·폐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제공

\* 회원국, 연관국 및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3개국 참여해야 하며, 최소 2개회원국 참여 필수

- **(유럽 군용판매 메커니즘, EU MSM\*)** 유럽 방산기술 산업기반 방산제품 카탈로그 구축 및 EU산 제품의 가용성 및 납기일 단축을 위해 방위산업 준비 목록(Defence industrial readiness pool)을 구축, 우선 구매·사용·임대 옵션 제공 \* European Military Sales Mechanism

- **(유럽 공동이익방위프로젝트, EDPCI\*)** 집행위원회는 작업계획에 따라 회원국 의견, EU 예산 평가, 방위 정책 목표 등을 반영하여 EDPCI를 지정·재정지원 가능, 최소 4개 회원국 참여 필수

\* European Defence Project of Common Interest

## ② 역내 방위 공급망 안보 체계 구축

- 역내 방산 제품 공급 안보(SoS, Security of Supply) 체계 구축 및 관련 공급망의 산업 역량 파악·우선순위 생산명령 등 위기 대응 구조 마련

- **(방위산업준비 위원회)\*** 매년 필수 방위 제품 목록 작성, 공급망 위기 시 대응 조치 결정, 위기 상태 발동 판단 등 핵심 역할 수행
  - \* 방위산업준비 위원회(Defence Industrial Readiness Board)는 EDIP의 방위 제품 공급 안보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신규 위원회로 집행위, EDA 고위대표,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 사무국은 집행위원회가 관리
- **(공급위기상태)** 방위산업준비 위원회는 안보 위기, 방산 제품·중간재·원자재 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 시,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 보고하고,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공급위기상태 발령을 제안하면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공급위기상태를 발동할 수 있음
  - 공급위기상태 발동 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사전 동의하에 방위 제품 및 방위 제품이 아닌 관련 중간재 기업에 정보수집\*, 우선생산 명령, 인증, 허가절차 단축 중 필요 조치를 선택적으로 발동 가능
    - \* 해당 기업의 생산 능력, 생산 용량 및 현재의 생산 차질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또한 역외국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집행위원회에 적시 통보 의무 부과
  - 관련 기업이 정당한 근거 입증 없이 △정보 미제공, △부정확한 정보제공, △역외국의 정보제공 요청 사실 미통보, △우선 생산명령 미이행 시 벌금 부과\*
    - \* 정보 미제공 및 부정확한 정보제공은 30만 유로 미만, 역외국 정보제공 요청 사실 미통보는 15만 유로 미만, 우선 생산명령 위반은 위반일 동안 이전 연도 평균 일일 매출액 1.5% 미만 벌금 부과

### ③ 우크라이나-EU 간 방위 기술 산업기반 협력 및 지원 강화

-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기반 회복 및 현대화 재건을 EDIP 도입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하며 EDIP우크라이나 지원 기구\* 수립
  - \* Ukraine Support Instrument는 단순 러-우 사태 대응 군사 장비 지원이 아닌, 우크라이나 자체적인 방위산업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한 재건 프로그램
-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법인은 SEAP를 통한 공동조달 및 유럽 군용판매 메커니즘의 방위산업 준비 목록에 포함 가능

- 또한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위산업과 관련된 조치를 다룰 경우, 방위 산업준비 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 EDIP 규정 추진 동향
  - 집행위원회 제안 이후, 의회와 이사회 간에 EDIP 수혜 자격과 예산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25.10.16일 합의에 도달하여 연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EDIP 수혜 기준)** 이사회와 의회는 EDIP 수혜 프로젝트는 역외 부품 사용 비중을 최대 35%까지 허용하고, 제3국 및 관련 기관의 제한 없이 제품 설계, 부품 교체·제거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합의
    - \* 미사일과 탄약의 경우 EDIP 도입 시에는 예외가 적용되나, EDIP 보조금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33년 말까지 관련 권한이 필요
  - EDIP 초안은 관련 프로젝트 및 기업이 원칙적으로 회원국이나 연관국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비연관 제3국 또는 기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 조항 제시

**(참고) EDIP 내 역외국 참여를 위한 예외 조항**

- EDIP 지원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EU 회원국 및 연관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나, 역내 관련 자산·수단이 없는 경우 역외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음, 단 EU의 안보방위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역내 EDTIB 강화에 기여 해야 함
- 역내 및 연관국에 설립되었으나 제3국 및 관련 기관의 통제를 받는 법인의 경우, EU의 외국인직접 투자(FDI) 심사를 거치거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회원국의 보증을 통해 조달에 참여 가능

- **(예산 규모)**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초안 예산 규모('26~'27년 EU 예산 중 15억 유로)에 합의했으며, SAFE 참여를 위한 역외국의 재정 기여금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
  - EU 예산 15억 유로 중, 3억 유로는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에 우선 배정, '26~'27년은 EDIP 전환기로 '28년부터는 차기 MFF 예산이 적용되어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현재 집행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영국·캐나다와 각각 SAFE 가입 협의 진행 중, 협상 결과에 따라 역외국 기여금이 EDIP 추가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

#### 4. 유럽 안보 실행 계획(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 ○ EU의 신속한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공동조달 대출 프로그램

- EU 집행위원회는 3.19일 2030 방위 백서 발표와 함께 유럽 방위 역량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1,500억 유로 규모 대출 프로그램 제안, 동 규정은 5.29일 발효
- 집행위원회는 SAFE를 통해 재정 여력이 상이한 회원국의 방산 제품 구매, 방산 제조 역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차입한 예산으로 회원국에 장기 대출을 제공할 예정
- 또한 역내 방산 제품 공동조달 시장을 조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복 조달을 방지하며, 전력 보강의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지원

##### ○ SAFE 규정의 주요 내용

- (지원내용) SAFE는 EU 회원국 포함 최소 2개국 이상 참여하는 방산 제품 공동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지원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 등 혜택 제공
- (대상품목) 공동조달 대상 방위 제품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 (카테고리 1) 탄약·미사일, 포병 시스템, 지상 전투 장비 및 보조 체계, 소형 드론(NATO Class 1) 및 對드론 시스템, 핵심 인프라 보호, 사이버 보안, 군사 기동성 관련 제품
  - (카테고리 2) 對공·미사일 방어체계, 해상·수중 전투 역량, 중·대형 드론(NATO Class2-3) 및 對드론 시스템, 전략적 수송·공중급유·C4ISTAR\*·우주자산 및 서비스, 우주 자산 보호, AI·전자전 관련 제품
- \* C4ISTA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Target Acquisition and Reconnaissanc)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반이 되는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표적 지정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

- (공동조달) SAFE는 2개국 이상의 EU 회원국, 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인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우크라이나가 추진하는 공동조달 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할 수 있음
  - \* SAFE 대출은 집행위원회에 신청한 EU 회원국에만 제공되며, SAFE를 통해 공동조달을 추진하는 국가 중 최소 1개국은 회원국이어야 함
- 단, 1개 회원국이 공동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26.5.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SAFE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역외국 조달 참가 조건) 원칙적으로 공동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EU, EEA-EFTA, 우크라이나에 설립되어야 하며 역외국 및 역외 기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됨, 단 일부 예외 조건 수립
  - EU 가입 후보 및 잠재 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및 양자 협약을 체결한 역외국은 조건부로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음
    - \* 몰도바, 노르웨이, 한국, 일본,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영국, 캐나다 등

**(참고) SAFE의 역외국 조달 조건**

- SAFE는 회원국의 방위 장비 공동조달이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SAFE를 통한 공동 조달의 경우 제품의 65% 이상이 EU와 EEA-EFTA, 우크라이나에서 조달되도록 명시, 관련 기업은 EU, EEA-EFTA, 우크라이나에 설립되었으며, 제3국 기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되며, 만약 제3국 기관의 통제를 받는 법인의 경우, EU의 외국인 직접투자심사를 거치거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회원국의 보증을 통해 조달에 참여 가능
  - \*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심사 프레임워크(EU) 2019/452
- EU 가입 후보 및 잠재 후보국 및 EU와 안보방위 협정을 맺은 역외국은 조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역외산 제품 비중을 최종 공동조달 가치의 15~35%로 제한, 15~35%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은, ① SAFE 규정 발효 전 이미 계약을 했거나, ② 2년 이내 관련 제품을 유럽 생산 제품으로 대체가능 할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조건 하에, SAFE 공동조달에 참여 가능
- 특히 카테고리2 관련 제품 조달 시, 설계 변경 권한 및 부품 교체 권한을 제약 없이 보장해야 함

**○ 회원국 SAFE 대출 신청 및 향후 집행 동향**

- EU 집행위원회는 SAFE 대출을 신청한 19개 회원국\*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1,500억 유로를 임시 배정(9.10), 폴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 상위 5개국 배정금액 총 예산 2/3 이상

- \*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 신청국들은 11.30일까지 구체적인 투자 계획서 제출, 집행위원회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대출금 확정 후, '26년 1분기 중 회원국과 대출 계약 체결 및 첫 번째 대출금 지급 예정
- 관련 방위 장비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SAFE 규정은 회원국 별 대출 계약 체결 후, 최대 15%까지 사전 자금 조달 허용 및 '30년 말까지 분할지급 완료 예정

○ **역외국의 SAFE 신청 동향**

- 영국, 캐나다, 한국, 터키 등의 역외국도 자국 기업의 조달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SAFE 가입 신청서 제출
-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영국·캐나다와 SAFE 가입 협상 위임권한을 부여, SAFE 가입을 위한 분담금과 조달 참여 비중 및 조건을 두고 협상 진행 중\*

\* 11.24일 작성일 기준

- 한편, 집행위원회가 10.16일 발표한 방위 대비 로드맵에 따르면, 유럽방위청(EDA)은 안보·방위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NATO와 기밀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 협정을 추진 예정, 영국·캐나다와의 SAFE 가입 협상이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

**5. EU 금융 기관의 방위 분야 지원 확대**

○ **유럽투자은행(EIB), 이중용도·안보 인프라 분야 대출 확대**

- 기존 유럽 금융기관은 방위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엄격한 조건을 적용했으나, 역내 방위산업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EIB는 대출 규정을 개정

- EIB는 '24.5월 이중용도 품목(dual-use product)에 투자 제한을 면제하여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민간 사용 가능 제품에 투자\*하고, 관련 분야 중소기업 전용 중개 대출 경로를 열어 지원을 강화
  - \* 폴란드 위성 개발과 NATO 요구에 따른 덴마크 항구 정비사업에 투자
- 한편 EU 19개국 회원국\*은 '25.1월 EIB에 공동 서한을 통해, 방위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대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
  - \*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 ①EIB 자금 지원 제외 목록 재검토, ②방위 자금 지원 확대, ③방위 채권발행 등 요구
- 이에 EIB는 '25.6월, '25년 안보·방위, 에너지 전환, 기술 경쟁력 분야 대출을 천억 유로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고, 이 중 안보·방위 분야에 대한 대출 비중 3.5% 명시
- 또한 EIB 총재는 EU-러시아 접경 지역의 방위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용 재원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10.10)
- EIB는 평판 저해, 규정 충돌 우려로 이중용도 장비·인프라, 군사 이동성, 사이버, 국경보안,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무기·탄약에 대한 직접 지원 불가 원칙은 고수
- 유럽투자기금(EIF), 방위 기술 투자 확대를 위해 EIB와 연계 강화
  - EIF는 EIB 소속으로 EU의 전략 목표에 따라 중소·벤처 등 혁신 민간 부문에 지분투자, 보증 등의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EU의 정책에 따라 안보·방위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 추세
  - EIF는 EIB의 지원으로 '24.1월 1억 7천5백만 유로 규모의 기금 (DEF, Defence Equity Facility) 설립하여 방위 기술 또는 이중용도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지원을 위해 지분 투자자로 참여\*
    - \* '25.5.22일 EIF는 벤처캐피탈사 Keen의 유럽 안보·방위 기술 펀드에 4,000만 유로 투자 계약 체결

- EIB는 안보·방위 프로젝트에 중개 대출, 보증,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EIF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금조달, 지분투자 역할 담당

## 6. 방위 대비 로드맵(Defence Readiness Roadmap) 2030

### ○ '30년까지 유럽의 방위 대비 태세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 집행위원회는 EU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앞서 발표한 방위 백서(3.19)의 지침을 바탕으로 유럽의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지표 등을 제시하는 통신문 형태의 로드맵 발표(10.16)
- 로드맵은 러시아의 군사화 견제 및 전쟁 억제를 위한 EU 재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회원국 간 방위역량 격차 해소·현대전 역량 확보를 위한 관련 첨단 기술(드론·위성·자율주행차 등) 혁신을 강조
- 또한 국방 문제에 집행위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기존 공동방위 체계를 주도하는 NATO와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

### ○ 방위 대비 로드맵의 주요 내용

#### ① 우선순위 방위역량 지정 및 관련 상황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선정한 9대 우선순위 방위역량을 바탕으로, 역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EU 차원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 EU 군사참모부\*와 회원국별 현황과 목표를 수립 중

\* EU 군사참모부(EUMS, European Union Military Staff)는 유럽 대외관계청(EEAS) 산하 기관으로 역내 군사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원국에 조기 경보, 상황 평가, 전략적 계획, 통신 및 정보 시스템, 교육 등을 제공

#### (참고) 방위 대비 로드맵의 9대 우선순위 방위역량

①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 ② 전략적 지원 수단(Strategic enabler)\*, ③ 군사 기동성, ④ 포병 시스템, ⑤ 사이버전자전·AI 수행 역량, ⑥ 미사일탄약, ⑦ 드론對드론 역량, ⑧ 지상전투 역량, ⑨ 해상전투 역량

\* 전략적 지원 수단은 무기의 효과적인 작동 및 작전 수행의 기반을 제공하는 수단 및 자산으로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C4ISR), 위성정찰·정보수집·감시정찰, 공중급유 시스템 등이 있음

- 또한 회원국 간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보 공유를 강조, 회원국의 국방역량·조달 상황 등 진척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매년 10월 연례 방위 준비 보고서 제출 예정

## ② 역량별 연합(Capability Coalitions) 구성

- (역량별 연합) 우선순위 방위역량의 효율적인 전문성 구축을 위해 '26년 1분기까지 주도국과 공동 주도국으로 이루어진 역량별 연합을 구성하고 '30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
- (우선순위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26년 상반기 내 모든 우선순위 분야의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26년 중반까지 관련 EU 방위산업 역량에 대한 초기 데이터 수집
- (공동조달) 집행위원회는 '30년까지 회원국 방위 장비의 35%까지 공동조달을 통해 구매하기로 했던 회원국 간 기존 합의를, '27년 말까지\* 최소 40%로 상향하여 공동조달을 가속하도록 권고
  - \* 현재 EU의 방위 장비 공동조달 비중은 20% 미만으로, 방위 백서는 '30년까지 40% 공동조달 제안, 로드맵은 3년 앞당겨 '27년까지 '40%로 목표 설정
- (자금 조달) 우선순위 방위역량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계약 및 자금 조달은 '28년 말까지, 관련 분야의 방위 장비 공동조달을 위한 SAFE 자금 조달은 '30년 말까지 완료 목표

## ③ 플래그십 프로젝트(European Readiness Flagships)

-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대응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 플래그십 프로젝트 제안, 회원국이 추진하는 관련 조치가 EU 도구 및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유럽 드론 방어 체계 구축) 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해 동부전선 감시뿐 아니라 발트해와 흑해 등 EU 전역의 국경 보안, 핵심 인프라 보호 등 EU 안보 문제에 대응

-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 드론 생태계 조성·연구 개발과 생산을 연계, 지속적인 기술개발 강조
- (유럽 방공망, **European Air Shield**) 회원국의 영공 보호를 위해 NATO 체계와 완전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다층적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 (유럽 우주 방어망, **European Space Shield**) 회원국의 방어 역량 강화와 우주 자산·서비스의 보호, 우주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갈릴레오, IRIS<sup>2</sup>\* 등 EU의 우주 시스템을 지원
- \* 갈릴레오는 EU가 독자 개발한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고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해 군사적 활용성 확대, IRIS<sup>2</sup>는 차세대 위성 기반 안전 통신망 프로그램으로 현재 구축 중이며, 향후 암호화된 광대역 위성 통신 제공 가능

#### ④ 역내 방위산업 강화

- 회원국 방위 수요에 맞춰 역내 방위산업기반(EDTIB) 구축 유도, 우크라이나 경험을 활용한 솔루션·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원자재 및 핵심 부품의 역외 의존도 줄이기 위한 공급망 회복 탄력성 확보 목표
- 방위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수요인 항공·미사일 방어, 드론, 우주 시스템을 중심으로 역내 제조 산업 역량 추적 예정
- 중소기업 혁신 촉진 등 방위산업 혁신 추진을 위해 11.19일 유럽 방위산업 전환 로드맵(European Defence Transformation Roadmap) 발표
- 연내 EU-회원국-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방위 기술 동맹(Tech Alliances for Defence)을 설립하고, '26년 중 연례 방위산업 정상회의 개최
- 또한, 안정적인 방위 장비 공급을 위해 산업별 역량 증대 계획을 모색하고, '26년 하반기까지 방위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의존성·공급망 등 위험 가능성을 분석하여 완화 조치 수립

### ⑤ 유럽 방위 대비 구축에서 우크라이나 역할 확대

- 우크라이나의 국방 강화를 유럽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장기 안보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우크라이나-EU 간 EDTIB 통합, 전장 경험·혁신 공유, 전후 재건 과정 연계 등을 추진
- 또한 우크라이나의 질적 군사 우위 보장을 위해 '25년 말까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 대출 및 200만 발 포탄 공급 계획 추진
- '26년 중 EU-우크라이나 드론동맹, SAFE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 평가, 공통 전장 문제 해결 지원 등 신규 정책 추진 예정

### ⑥ 추가적인 지원 정책

- 방산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역내 단일시장 강화를 위해 EU의 공동조달 규칙 및 내부 국경 간 이전 지침 검토, 방위 분야 규정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및 추가 미니 옴니버스 채택 예정
- 군사 이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핵심 프로젝트 선별, 유럽 연결 기금(CEF) 내 관련 프로젝트 등으로 국가 간 격차와 병목 현상 해소

**<참고 : EU 방위 대비 로드맵의 주요 조치 추진 일정>**

방위역량 강화	목표 일정
1. 역량별 연합 구성 및 주도국-공동 주도국 선정/ 연합 별 실행 계획 확정	'26년 1분기/ '30년
2. EU 회원국의 우선순위 방위역량별 산업에 대한 초기 데이터 수집	'26년 중반
3. 모든 우선순위 방위역량의 분야별 프로젝트 착수	'26년 상반기
4. 방위 조달의 최소 40% 공동조달	'27년 말
5. 우선순위 방위역량의 격차부족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안 마련	'28년 말
6. 우선순위 방위역량에 대한 SAFE 자금 조달 완료	'30년 말
플래그십 프로젝트	
<b>드론</b> 1. 정상회담(EUCO)에서 우선순위 핵심 사업으로 승인	'25년 말
2.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와 동부전선 감시체계 출범	'26년 1분기
3. 관련 분야 스케일업 및 공동조달을 위한 EDIP 공모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한 SAFE 사전 자금 지급	'26년 1분기
4. 유럽 드론 방어 및 동부전선 감시 체계의 초기 역량 구축	'26년 말
5. 유럽 드론 방어 완전 가동	'27년 말
6. 동부전선 감시 체계 가동	'28년 말

<b>방공</b> 1. 정상회담(EUCO)에서 우선순위 핵심 사업으로 승인	'25년 말
2. 유럽 방공망 가동	'26년 2분기
3. EDF, EDIP 작업 프로그램에서 관련 조치를 우선순위로 설정	'26년 말
<b>우주</b> 1. 정상회담(EUCO)에서 우선순위 핵심 사업으로 승인	'25년 말
2. 회원국의 SAFE 공동조달 협력을 위해 우주, IRIS <sup>2</sup> , EDF, EDIP 등에서 우주 방어망과 관련된 조치를 우선순위로 조정	'26년부터
3. 유럽 우주 방어망 출범	'26년 2분기
<b>방위산업 강화</b>	
1. EDIP 법안 채택 및 집행위원회는 방위산업 전환 로드맵 발표	'25년 11월
2. 방위 기술 동맹(Tech Alliances for Defence) 설립	'25년 말
3. 집행위원회와 방위역량 주도국 간 전략 산업 대화 확대 및 첫 연례 방위산업 정상회의 개최	'26년 중반
4. 집행위원회, 우선순위 방위역량에 대한 산업 역량 확대 개요 제시	'26년 중반
5. 원자재 의존도 및 병목 현상 위험 분석 및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행동 계획 수립	'26년 하반기
6. 방위산업 종사자 20만 명 재교육	'26년
7. 경쟁력 기금을 비롯하여 방위 분야 프로그램이 차기 MFF로 채택 및 관련 운영 준비 완료	'27년 말
<b>유럽 방위 대비 구축에서 우크라이나 역할 확대</b>	
1. EDIP 내 우크라이나 지원 기구 러시아 자산 활용 배상 대출 계획 채택	'25년 말
2.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의 200만발 포탄 공급 계획 이행	'25년 말
3. 우크라이나를 회원국 역량별 연합에 포함 및 EU-우크라 드론 동맹 출발	'26년 1분기
4. SAFE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여도를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평가	'26년 1분기
5.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원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 장려 조치 제안	'26년 1분기
6. 우크라이나와 공동 식별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솔루션 지원을 위한 '브레이브 테크 EU' 발표	'26년 말
7. EU 군사원조임무 유지 및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연합 '의지 연합(coalition of willing)' 지원	-
<b>추가 지원 정책</b>	
1. 방위 옴니버스 및 미니 옴니버스 채택	'25년 말
2. 단일 시장 강화 위한 공공조달 및 역내 이전 지침 평가	'26년 말
3. 군사 기동성 패키지 발표	'25년 말
4. 군사 기동에 관한 핵심 프로젝트 식별 및 우선 순위 부여	'26년 1분기
5. 군사 기동성 패키지 채택	'26년 말
6. 유럽 연결 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의 기동성 관련 신규 창구 신설	'27년 말
7. EIB, EIF와 협력하여 방위 스케일업 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 지원에 최대 10억 유로 규모 펀드 조성	'26년 1분기
8. 차기 EU 다년도 재정계획(MFF) 승인	'27년 말
9. SAFE 자금의 최소 50% 집행 완료	'28년 3분기

자료 : EU 집행위원회 방위 대비 로드맵 2030 통신문([링크](#))

○ **향후 전망 및 회원국 입장**

- 로드맵은 통신문 형식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EU 대표 방위 정책인 방위 백서를 구체적인 틀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 예상
- 로드맵 발표 이후 집행위원회는 '2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10.21), 업무계획에는 방위 대비 로드맵에서 언급된 조치 외 '26년 중 추진할 방위 관련 업무계획과 관련 일정이 포함

**<참고 : '26년도 집행위원회의 방위 분야 업무계획과 일정>**

내용	목표 일정
방위 단일시장 관련 통신문(Communication on the Defence Single Market: EU technological base fit for future)	1분기
군사적 우위 확보 프로그램(Qualitative Military Edge programme)	1분기
유럽 우주 기반 방위 행동계획(European Space Shield - action plan)	2분기
방위 및 민감 안보 분야 조달 간소화(Simplifying defence and sensitive security procurement)	3분기
핵심 통신체계 구축(Creation of a European critical communication system)	3분기

자료 : EU 집행위원회 '26년 작업프로그램([링크](#))

- 회원국은 정상회담(10.23)을 통해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 로드맵에서 제시한 9개 우선순위 방위역량마다 주도국과 공동 주도국을 선정하는 등 역량별 연합 구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

**7. 군 기동성 규정(Regulation on military mobility)**

\* 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to facilitate the transport of military equipment, goods and personnel across the Union

○ **회원국 간 신속한 군 수송을 보장하는 군용 쉐젠 지역 구축**

- EU 집행위원회는 11.19일 군 기동성 강화 및 회원국의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EU 최초로 군 수송에 관한 회원국 간의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도입하는 군 기동성 규정의 입법을 제안

- 군 기동성 패키지는 '27년까지 군인·군수 물자·장비 등 신속한 군 수송 보장을 위해 '군용 쉹겐' 구축을 목표로 EU 차원의 군용 및 위기 시 운송·조세·안전 규칙을 수립하도록 제안
- EU는 군 기동성 강화를 위해 '28~'34년 차기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MFF) 중 총 170억 유로를 이중용도 운송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

## ○ 군 기동성 규정의 주요 내용

### ① 군 수송 절차 간소화

- 회원국 간 군 수송 허가에 관한 공통 규칙을 수립하고 운송 및 통관 서류를 통합하여 군사적 필요에 맞춘 단일 수송 허가제 도입
- 집행위원회는 '30년까지 회원국 간 군 수송 절차·운송을 위한 교통 조정·군수 물자의 통관 절차 허가 등을 디지털화하고 '군 기동성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 해당 허가 제도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관련 수송 허가 요청 시, 정기 군사 작전의 경우 2개월 내, 특정 일회성 작전의 경우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② 긴급 대응 능력 강화

- EU의 새로운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EU의 비축 및 재고 전략\*과 연계해 사회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

\* European Preparedness Union Strategy('25.3.26)

- 필요시 EU 전역에서 민간 교통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적시에 군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 기동성 강화 대응 시스템(EMERS, European Military Mobility Enhanced Response System) 구축
- EMERS는 발동 조건 충족 시, 집행위원회 판단 및 최소 1개 회원국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안하고, 이사회는 요청 후 48시간 내 승인 여부를 결정, 발동 시 최대 12개월까지 적용 가능

- EMERS 발동 시, EU 전역에 적용되며 모든 군 수송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수송 협조를 요청하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경 도착 예정 시각의 최소 6시간 전까지 통보 필요
- 또한 EMERS 발동 기간 동안 회원국 및 관련 인프라 관련자는 군 수송에 대해 각종 교통망·인프라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

### ③ 전략적 이중용도 인프라 보호

- 전략적 이중용도 인프라(SDI, Strategic Dual-use Infrastructure)\* 보호를 위해 회원국은 본 규정 발효 이후 2년 이내 자국 영토 내 SDI 목록 작성 및 정기적 갱신 의무화
  - \* 회원국 수도를 연결하는 핵심 운송 인프라나 군용 기동 통로에 위치한 교통 허브 지역의 최대 규모 항만·공항·화물터미널, 최소 100만 인구 도시를 포함하는 범유럽 운송망(TEN-T)의 도시 거점 연결 인프라 등
- 이에 따라 회원국은 군용 기동 통로(Military mobility corridors)\* 중 이중용도 인프라를 군 수송에 맞도록 정비하고 관련 잠재적 위험 및 기능을 평가해야 함
  - \* EU 이사회는 군 기동성을 위한 4개 군용 기동 통로(북부, 중북부, 중남부, 동부)를 식별(3.15)
- 또한 회원국은 SDI 소유·운용·관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SDI가 역외국의 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심사 등 통제 강화

### ④ 회원국 간 기동성 관련 자산 공유 및 통합 장려

- 군 수송 작전 수행 시, 회원국 간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보유한 수송·물류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대 자산 풀(Solidarity Pool) 구축

**(참고) 연대 자산 풀(Solidarity Pool)의 수송 및 물류 분야 예시**

△육상(군용·이중용도 트럭, 중장비 운송 차량, 특수 수송 장비), △철도(플랫폼 화차, 대형 장비 적재용 특수 화차, 기관차), △항공(전략 전술 수송기, 이중용도 수송기), △해상(군수 물자 적재용 Ro-Ro 선박·바지선, 항만 하역 및 물류 장비), △물류(연료 공급 장비, 야전 물류 지원, 이동식 정비(MRO) 장비), △EU 조달 자산, △그 외 민간 운영자와 계약을 통해 확보된 수송·물류 장비도 계약에 허용 시 등록이 가능

-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연대 자산 풀에 관련 자산을 등록할 수 있으며, EU 재정으로 조달된 장비는 의무적으로 등록됨
- 관련 장비가 필요한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요청 후, 집행위원회가 연대 자산 풀에서 지원, 미사용 중인 자산은 등록된 국가의 필요에 따라 또는 상업 목적으로 사용 가능

**8. 방위산업 전환 로드맵(Defence Industry Transformation Roadmap)**

- 혁신기술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생태계를 재편
  - EU 집행위원회는 11.19일 군 기동성 규정을 제안하며 동시에 방산 첨단 기술 혁신과 생산 역량 증대를 도모하는 방위산업 전환 로드맵 발표
  - 방위산업 전환 로드맵은 통신문으로 제안되었으며 EU의 방위 우선 순위 분야 기술 및 장비를 신속히 배치·대량 생산 할 수 있도록 EU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와 일정을 제시
  - 특히 러-우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대전의 양상에 맞춰 방위 산업의 민첩성, 대응력, 첨단 기술 활용, 신속한 생산 증대, 물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EU 방산 혁신에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강조
- 유럽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첨단 방산 생태계 조성) 혁신 민간 기술을 방산 분야에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역내 스타트업·중소·중견 방산기업의 신속한 첨단 방위 솔루션 개발 및 배치 지원

- **(우크라이나 역할 확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설치된 EU 방위혁신 사무소(EUDIO)의 역할을 강화하여 EU 방산사무소(EU Defence Industry Office)로 확대하고, 조속히 Brave Tech EU\* 실행
  - \*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기술로 EU 방위 혁신을 가속화하고, 첨단 방위 솔루션을 공동개발·테스트·배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이니셔티브('25.7월 발표)
- **(AI·양자·우주 기술 강조)** 차세대 방위 산업의 핵심 기술인 AI·양자·우주 기술에 대한 R&D 및 이를 기존 방위 체계에 통합하는 상용화 관련 투자 확대
- **EU의 방위 산업 전환을 위한 구조적 과제 식별 및 솔루션 제시**
  - **(투자 지원 확대)** EU와 회원국 차원의 공동 투자기금 확대 및 민간 자본 유치 촉진, '26.1분기까지 혁신 기업에 대한 성장 자본 제공 및 최대 10억 유로 규모의 Fund of Funds\* 설립
    - \*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
  - **(제품 출시 기간 단축)** 제품 개발에서 출시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범 제도(AGILE)를 '26.1분기 중 제안 예정, 또한 신규 기업의 기존 EU 연구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강화
    - \*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 시설, 인공지능 팩토리, 반도체 파일럿 라인, 양자 관련 인프라, 회원국 소유 테스트 센터 등
  - **(방산 조달 절차 개선)** 방산 조달에 신규 진입하는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4분기 중 기술 연맹(Tech Alliance)을 출범하고, EU 방위기금(EDF) 지원 프로젝트 등 혁신기술에 대한 조달 촉진
  - **(인적 역량 강화)** 방산 분야에 특화된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 및 다양한 배경의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 전직 프로그램 강화, '26.4분기까지 분야별 EU 방위산업 인재 플랫폼 구축

○ **향후 전망**

- 방위 산업 전환 로드맵은 통신문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같은 날 발표된 군 기동성 규정(11.19)과 함께 EU 방위 백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향후 이사회와 의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

<참고 : 방위산업 전환 로드맵의 주요 조치 추진 일정>

조치 분야	조치 내용	목표 일정
투자	EIB/EIF의 최대 10억 유로 규모 펀드 오브 펀드(FOF) 설립 지원	'26년 1분기
제품 출시 기간 단축	방위혁신 시범도구(AGILE) 제도 제안	'26년 1분기
	신규 방위 기업의 EU 인프라 접근성 강화 및 EDA의 기존 방위 시험, 평가 지원	'26년 중 개시
	제조와 보안의 서비스화(Manufacturing/ Security-as-a-Service)를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	'26년 2분기
	역내 방위 단일 시장 강화를 위해 국가 간 방위 기술의 인증 및 검증에 대한 상호 인정 제도 제안	'26년 말까지
	데이터 상호 운영을 위한 유럽 방위 데이터 공간 구축 제안	'28년 까지
방위 조달 절차 개선	SAFE와 연계하여 우선순위 방위역량 기업과 최종 사용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EUDIS 기술 연맹(Tech Alliance) 출범	'25년 4분기
	EDF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 제품의 신속조달 촉진을 위해 방위 기술 및 제품 시장 플랫폼 구축	'26년 4분기
	신규 혁신 이중용도 기업의 제품 구매, 계약, 투자 유치 등 혁신 역량 기술의 수요 확대	'26년 4분기
	회원국 방위 조달 예산의 최소 10%를 신흥·파괴(emerging and disruptive) 기술에 할당하도록 장려	'26년 2분기
	방위 및 민감 안보 조달 지침(2009/81/EC) 개정	-
방위 역량 및 인재 양성	자동차 및 공급망 실직 근로자들의 EU 전략 성장 분야로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술 보장 시범 사업	'25년 4분기
	방위 산업 인재 플랫폼 구축 및 방위산업 인재풀 확보 지원	'26년 4분기
	기존 EU 온라인 아카데미 활용하여 방위 인재 양성/ 독립적인 EU 방위산업 기술 아카데미 설립 추진	'26년 2분기/ '28년부터

자료 : EU 집행위원회 방위산업 전환 로드맵 통신문([링크](#))

## IV 시사점

### □ EU와의 방산 협력 기회 확대 전망

#### ○ EU 방위 지원 자금 활용 및 정책 협력 기회 모색 필요

- EU는 '28~'34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에서 방위·우주 분야 예산을 현행 대비 대폭 증액(집행위 1,310억 유로 제안)할 계획으로, 향후 공동조달 시장을 포함한 EU 방산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
- EU는 역내 방위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유럽 방위기금(EDF), 유럽 방위 산업프로그램(EDIP), 방위 장비 공동조달 규정(SAFE)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 중

#### ○ 정책별 수혜 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EU는 방위 지원 정책 수립 시, 역내 산업기반 육성을 우선 하며 유럽 기업 중심의 수혜 조건을 마련, 수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EU 회원국 및 연관국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역외국 및 역외 기관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존재
- 하지만 역외 안보·방위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및 신속한 장비 조달을 위해 일부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
  - SAFE는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및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관련 공동조달 최종 제품 비중의 35%까지 역외산 부품 공급 허용
  - 이에 한국을 포함한 일부 역외국(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은 공동 조달 한도 확대를 위해 EU에 SAFE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영국·캐나다와 가입 조건 협상이 진행 중임
  - 한편,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EDIP의 경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역외산 부품 비중 35% 상한에 잠정 합의

- 따라서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 정책별 참여 자격 요건, 설계 권한 등 수혜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원국 정부와의 협의 및 역내 기업과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역내 산업 시설 마련 등 전략 수립 필요
- EU의 우선순위 방위역량을 중심으로 공동조달 참여 및 EU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EDIP는 EU 회원국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9대 우선순위 방위역량 분야\*를 지정하고, 회원국은 '25년 내 각 분야별 주도국과 공동 주도국이 포함된 역량별 연합(Capability coalition)을 구성할 예정
    - \* ①항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 ②전략적 지원 수단(Strategic enabler)\*, ③군사 기동성, ④포병 시스템, ⑤사이버·전자전·AI 수행 역량, ⑥미사일·탄약, ⑦드론·對드론 역량, ⑧지상전투 역량, ⑨해상전투 역량
  - 특히 각 역량별 연합의 주도국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주도국을 중심으로 역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생산 설비 구축, 기술 협력 등 진출 기반 마련 필요
  - 또한 EU는 방위산업 기술 개발과 공동조달을 넘어, 장비의 유지·보수·폐기로 이어지는 전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사업 모델 설계 및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방위산업 공급망 재편 동향 유의 및 대응 전략 필요

- EU 방위 지원 정책, 산업 및 공급망 분야까지 확대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EDF 중심의 방위산업 분야 혁신 R&D 지원에서 나아가, 유럽방위산업전략, 방위 백서 등을 통해 공동조달·산업 역량 확충·공급망 안보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현재 입법 진행 중인 EDIP는 방산 공급망 위기 선언 시, 방위 제품뿐 아니라, 관련 원자재와 부품 공급 기업에도 관련 정보 요구 및 우선 생산 명령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됨
- 따라서 역내 관련 제품 공급망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생산 여력, 조달 계약상 의무, 수출 통제 연계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
- EU-우크라이나 방산 협력 강화에 따른 공급망 구축 전망에 유의
  - EU는 우크라이나와 방위산업기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단순 수혜국을 넘어 유럽 내 방위 제품의 생산·정비·부품 공급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특히, 탄약·미사일·드론 등 전시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장기화되며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EU-우크라이나 공동생산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 따라서 역내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방위 제품별로 EU-우크라이나 간의 핵심부품 생산 및 설계→완제품 생산→정비·수리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네트워크 조성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모색 필요

## 부록 1 EU 주요 방위산업 정책 표

정책	주요 내용	법적 성격 (입법/제안 연도*)
<b>공동외교안보정책</b> (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EU 차원의 대표 외교·안보 정책	EU 조약 ( <a href="#">93.11월</a>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b>공동안보방위정책</b> (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FSP의 제한을 넘어 안보방위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	EU 조약 ( <a href="#">09.12월</a> 리스본 조약 발효)
<b>유럽 방위기금</b> (EDF, Europe Defence Fund)	국방 분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EU 기금	규정 ( <a href="#">21.4.29일</a> 입법 완료)
<b>EU 전략 나침반</b> (Strategic Compass)	EU 공통 위협을 평가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비전 제시	통신문 ( <a href="#">22.3월</a> 이사회 공식 승인)
<b>유럽방위산업전략</b> (EDIS,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최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전략문서	통신문 ( <a href="#">25.3.5일</a> 통신문 발표)
<b>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b> (EDIP,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역내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정책	규정 ( <a href="#">25.3.5일</a> 제안, <a href="#">입법 진행 중</a> )
<b>EU 방위 백서: 대비태세 2030</b> (Defence Readiness 2030)	'30년까지의 EU 방위 계획 및 전략 수립	통신문 ( <a href="#">25.3.19일</a> 통신문 발표)
<b>유럽 안보 실행 계획</b> (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EU의 신속한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공동조달 대출 프로그램	규정 ( <a href="#">25.5.29일</a> 법안 발효)
<b>방위 대비 옴니버스</b> (Defence Readiness Omnibus)	방산 분야 투자·생산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 패키지	통신문과 법안(규정) 개정 패키지 ( <a href="#">25.6.17일</a> 제안, <a href="#">입법 진행 중</a> )
<b>방위 대비 로드맵</b> (Defence Readiness Roadmap 2030)	'30년까지 유럽의 방위 대비 태세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 제시	통신문 ( <a href="#">25.10.16일</a> 통신문 발표)
<b>군 기동성 규정</b> (Regulation on military mobility)	회원국 간 신속한 군 수송을 보장하는 군용 쉐켄 지역 구축을 위한 규정 입법	규정 ( <a href="#">25.11.19일</a> 제안, <a href="#">입법 진행 중</a> )
<b>방위산업 전환 로드맵</b> (Defence Industry Transformation Roadmap)	혁신기술 신속 활용을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개편 및 지원 조치와 일정 제시	통신문 ( <a href="#">25.11.19일</a> 통신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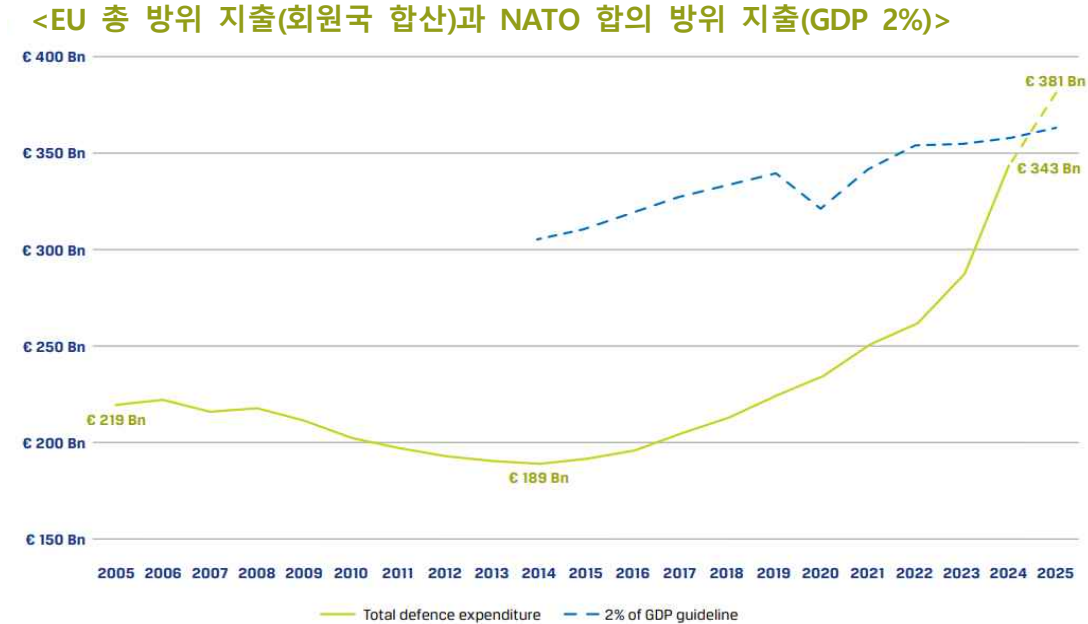
\* 참고 : 입법/제안 연도 클릭 시 관련 링크 연결

### (참고) EU 입법 문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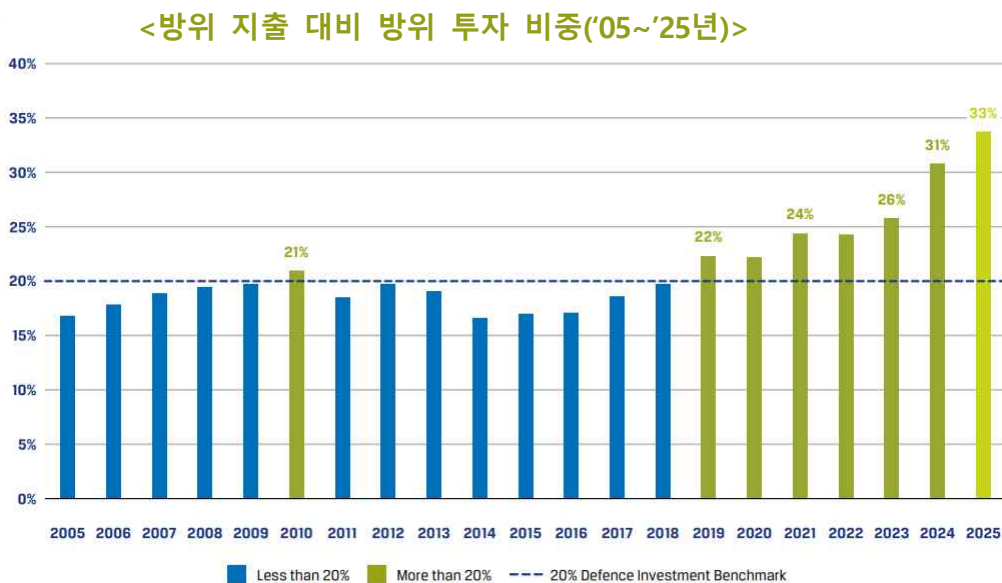
- **EU 조약(Treaty)** : 회원국 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EU의 목표·기관·의사결정 규칙 등을 설정하는 기본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
- **규정(Regulation)** :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 국내법으로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EU 차원이 단일한 법으로 작용
- **통신문(Communication)** : EU 차원의 정책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후속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법적 제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음

## 부록 2 EU 방위 지출 동향

### □ EU의 총 방위 지출 확대('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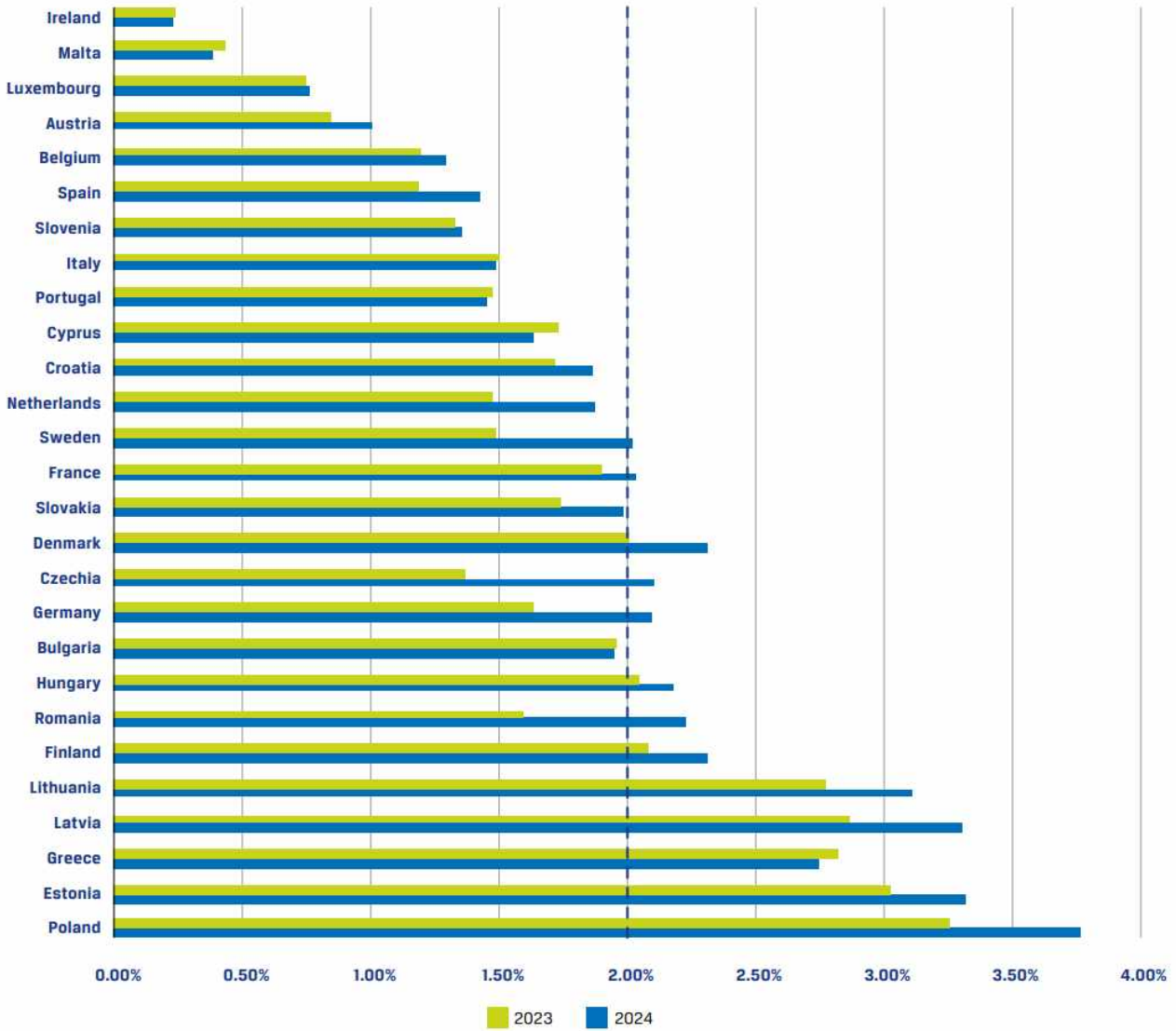
### □ EU 방위 지출 대비 방위 투자 비중('05~'25년)\* 증가



\* 참고 : 방위 지출은 정부가 방위 관련 지출하는 모든 비용의 총합으로 인건비, 운영비, 방위 투자, 국제기구 분담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방위 투자는 미래 방위역량 확보를 위한 자본성 지출로 무기 및 장비 신규 구매, 방위 R&D 및 혁신, 방위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

□ EU 회원국, '23~'24년 국방비 지출 상승

<회원국 별 '23 및 '24년 국방비 지출 동향>



자료 : 유럽방위청(EDA)의 '24~'25년 방위 데이터 "Defence Data 2024-2025"[\(링크\)](#)

## 작 성 자

- 브뤼셀무역관 윤윙희

# EU 방위산업 주요 정책 및 동향

Global Market Report 25-066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문의처	브뤼셀무역관(+32-2-205-0083)

- ISBN : 979-11-402-1450-1(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